

살면서 힘이 되는 법 이야기

요약본

Module 4. 교통사고 처리법규의 이해

교통사고 헉! 이런 경우는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적용대상, 기본내용
2.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및 기타 형사처벌 대상행위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
3. 종합보험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되는 경우
에 있어서의 대응요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적용대상, 기본내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1 조).

☞ 즉, 운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처벌을 면제하여 생활의 편익을 주고, 이를 통해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신속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

"차(車)"로 인한 "교통사고(交通事故)"

가. 차(車)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 2 조 제 16 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2 조 제 1 호).

도로교통법 제 2 조 제 16 호 가목의 규정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 결국 자전거 사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교통사고 전담법정에 가보면 자전거 사고로 재판 받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동력을 장착한 것으로 오토바이를 포함합니다.

나. 교통사고(交通事故)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 즉,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도 교통사고입니다.

☞ 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파손)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 151 조에서 “2 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기본내용

가. 인신사고(人身事故)의 법정형(法定刑)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 금고(禁錮)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음.

나. 원칙

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예컨대 간통죄)와 대비됩니다. 즉, 고소가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공소 :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만 형사소송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므로 공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조문(法條文): 차의 교통으로 제 1 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 151 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 사고유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권 없음

법조문(法條文):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 4 조 및 제 126 조 내지 제 128 조, 육운전행법 제 8 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 3 조제 2 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 헌마 764, 2008 헌마 118(병합)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 6891 호로 개정된 것)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이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재판입니다. 우리법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등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에 반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므로 모든 법률과 공권력의 작용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되는데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법률 이권 공권력 행사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지만 법률도 효력을 상실하고 공권력 행사도 위법한 것이 됩니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도 담당합니다.

다. 예외

- 사망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본문)
- 뺑소니 사고, 중과실 11 개 항목(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각호)

☞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정만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사고들입니다.

2.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및 기타 형사처벌 대상행위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

1) 교통사고 11 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각호

다만, 차의 운전자 제 1 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대 중과실은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것, 혹은 이것도 안 지켰다면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므로 한번 혼이 나야한다는 것입니다.

가.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제 13 조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 62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다. 20 km/h 초과 과속운전

도로교통법 제 1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라.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제 21 조제 1 항·제 22 조·제 23 조 또는 제 6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끼어들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단 무조건 정지하세요.

바. 횡단보도사고

도로교통법 제 2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보행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 신뢰의 원칙(판례로 확립)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 “교통 법규를 현재 준수하여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 까지 대비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 원칙에 따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운행한 경우 신호에 위반한 보행자를 치었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 43 조제 1 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26 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 96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5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 외에 환각성 약물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자. 보도침범 등

도로교통법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 1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차. 승객추락방지의무, 승차정원 등 위반

도로교통법 제 3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자는 사람이 다 탑승했는지, 문이 꼭 닫혔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 뺑소니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 1 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뺑소니는 형사법에서 상당히 무거운 죄에 속합니다. 뺑소니를 칠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차에 치거나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사망할 우려가 있기에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여 형을 무겁게 규정하였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가. 도로교통법 제 2 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

가)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5.8.4>

가)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주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모두 도주로 봅니다. 따라서 병원으로 피해자를 옮기고 연락처나 주소가 없는 명함을 주고 떠난 경우도 판례상 뺄소니로 봅니다.

☞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사망한 피해자를 매장하거나 사고 현장을 떠나 잘 발각되지 않는 곳에 옮기고 간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본문

차의 교통으로 제 1 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 151 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 1 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상해사고

① 헌법재판소 결정내용(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 헌마 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본문 헌법소원사건

●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학생으로 2004. 9. 5. 12:59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소재 타워팰리스 E 동 아파트 앞 3 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청구외 이○주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휠더 및 유리창 부분에 부딪혀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두개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이후 청구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와 안면마비가 오는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게 되었고, 결국 학업마저 중단하였다.

위 교통사고를 담당한 검사는 2004. 12.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 조 제 1 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요지

주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 6891 호로 개정된 것)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요지 :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 258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② 중상해의 의미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중상해의 의미를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판시하였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참작하여 향후 입법으로 해결할 것임.

3. 종합보험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응요령

1) 중상해 사고의 경우(11 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가 아님을 전제로 함)

가. 피해자와 합의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혹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검사는 “공소권 없음”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됨.

합의서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사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합의서는 공증을 받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득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무인을 찍고 신분증을 앞뒤로 사본하여 첨부하여야 함.

나. 공탁

피해자가 연락자체를 받지 않거나 가해자의 경제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득히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피해자 앞으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당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

이 경우 합의한 경우처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에서 참작되어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공탁이란 사전적으로는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피해자 또는 상대방을 위하여 법원에 돈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2) 11 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 피해자와 합의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나 합의를 하지 않거나 공탁을 한 경우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됨.

합의서 작성요령은 중상해의 경우와 동일함.

나. 공탁

피해자가 연락자체를 받지 않거나 가해자의 경제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득히 공탁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합의를 한 것 보다는 못하지만 형량에서 참작되어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3) 소결

진정으로 사과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중대하게 다친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족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임과 동시에 도리일 것입니다.

차(車)는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기(利器)인 동시에 인류의 행복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행자들, 거리를 함께 주행하고 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나와 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음을 명심하면서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